

기획특집

— 가족정책 —

- 전환기의 가족정책 성과와 과제
김 은 정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 가족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함 인 희 (이화여대 사회학과교수)
- 한국가족의 특징과 가족정책의 주요 쟁점
김 혜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환기의 가족정책 성과와 과제

김 은 정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1. 들어가며

올해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된 지 6년이 되는 해이며,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이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하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가족정책은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2008년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올해 3월 19일에는 다시 여성가족부로, 그 소관이 바뀌어 왔다. 갓 태어난 가족정책이 가장 좋은 '양육환경'을 만나기 위해 자주 등지를 옮긴 셈으로, 비록 부처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정책 발전 전략에 대한 다양한 실험의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안정적으로 보다 많은 역량의 투입이 될 수 없었던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하지만 아쉬워할 겨를도 없이 가족정책을 둘러싼 환경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의 도약을 위해 호흡을 고르고 있다. 마침 올해는 범정부적인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제2차 가족실태조사가 추진된다. 가족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가족의 일반적 모습과 가족관계, 정책적 요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가족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가족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 외에 그간 가족정책이라는 이름을 걸고 추진해온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이 당초 목표에 대비하여 얼마나 성취되었고 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만 가족정책을 전략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1) 올해 2010년은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며,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던 가족업무가 다시 여성가족부로 재이관된 해로서,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 함께 시작된 보편적 가족정책이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라는 뜻에서 사용된 용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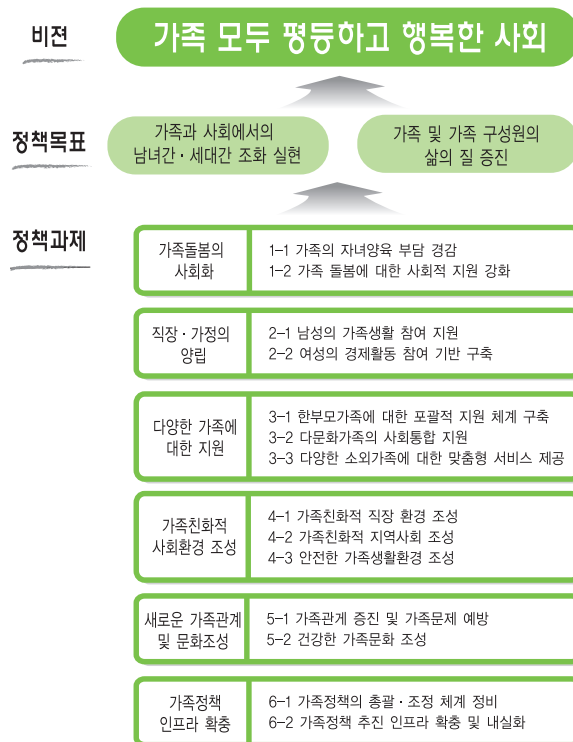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가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향후 마련될 제2차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올 한해 여성가족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2. 무엇을 이루었나?

가족정책의 범위나 출발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가족을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이 시작된 해이다. 가족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2004년 이후부터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마무

리되는 올해의 현시점까지로, 건강가정기본계획상의 과제를 위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지난 6년간 이룬 가족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등 가족정책의 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가족정책에 대한 정의나 범주에 대한 근거는 없지만, 건강가정기본법은 전체 가족을 정책의 단위로 인식하고, 가족관계 증진과 역량 강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본 최초의 법인 것이다. 동 법의 이념적 배경이나 ‘건강가정’에 대한 각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가족정책을 유형화하고 전담 조직 생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06년 마련되어 2008년 가족정책의 보건복지부 이관 이후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09년 수정되었다.



추진실적을 정책과제별로 살펴보면, ‘가족돌봄의 사회화’와 관련하여서는 아이돌보미 사업의 추진, 보육서비스의 제공 확대 및 지원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08.7~),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파견 확대 및 전자바우처 제도화로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아이돌보미 사업은 그간 민간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던 가정 내 돌봄서비스를 정부에서도 제공하게 됨에 따라,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믿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돌봄 서비스 수요 급증과 다양화에 적극 대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2006년에 2개 지역의 시범사업으로 출발하여 2009년에 전국 단위의 서비스로 단기간에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것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직장·가정의 양립’에 있어서는 배우자 출산간 휴가제 도입으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또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유·사산휴가 법제화, 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급여 인상으로 출산·육아기 여성의 계속 취업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이 신설되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2007년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고 부자가정, 조손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미혼모의 자녀양육비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연령을 지속 상향 조정(’07 만6세 미만 → ’09 만10세 미만)하고, 2007년부터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당,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on-off

라인으로 출산·양육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대처를 지원하기 위한 미혼모·부 거점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입양 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서는 입양수수료, 아동입양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입양시의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 금액이 소폭이지만 확대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영역은 단기간에 가장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많은 정책과제를 가진 영역으로 그간 급속한 성장을 하여왔다. 2007년 12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등 관련 법·제도가 빠르게 마련되었으며, 2006년 21개소에 불과하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09년에는 100개소로, 올해는 159개소로 급격히 증가하여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 및 상담, 자조모임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중추 서비스 전달체제로 자리매김하였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으로는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확산하고 다문화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미등록 중개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올해 4.28에는 결혼당사자 간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등 결혼중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결혼중개업법을 개정하였다.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2007년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매년 기업의 가족친화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2008년에는 14개, 2009년에는 20개 공공기관 및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2005년 폐지된 호주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등록 제도인 ‘가족관계등록제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가 2008년부터 실시되었고, 각 지역 건강 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생활 교육, 상담,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으며, 민법 개정으로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이 제한되고,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인정하는 등 민주적 가족관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10 138개)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10 159개)의 유형적,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품앗이 양육 확산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무형적 인프라의 확산을 위한 노력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정책 과제들을 추진한 성과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매우 우수한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모든 국민이 체감하는 가족정책을 발굴·시행하는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양적 확장의 부작용으로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복과 체계성 미흡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정책 전반을 꿰뚫는 일관된 철학적 기반이 약하다는 점이다. 이는 가족정책의 중요성과 시급성, 가족정책의 기능에 대한 정부 내에서의 공감대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였고,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온 데 기인한 문제들일 것이다.

3. 가족정책의 현 위치와 2010년 중점 추진 과제

가족정책은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라는 근본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가장 늦게 간판을 내걸었기에, 가족정책은 다른 정책과의 차별화와 정체성 확립이라는 태생적인 고민을 안고 있다. 또한 가족정책은 여성정책이나 청소년정책과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정책적 지지그룹, 전문가 그룹이 불분명, 또는 약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고유의 영역을 개발하고 확장해 나감과 동시에 가족정책만의 비전과 철학을 구축함으로써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선진 사회의 구현에 기여하는 나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가족을 둘러싼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오늘날 우리의 가족은 핵가족화, 저출산으로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세대구성이 단순화되어 돌봄 등 전통적인 가족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1975년 5명이던 평균가구원 수는 30년이 지난 2005년 2.9명이 되었고, 10가구 중 8가구는 핵가족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혼 증가,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1인 가구, 한부모 가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 1인 가구 6.9%(’85) → 20%(’05) / 한부모가구 848천 가구(’85) → 1,370천 가구(’05)

가족관계 측면에서는 우리사회의 ‘일 중심’ 문화로 인한 장시간 근로 관행, 최근의 경제위기, 사교육비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 요인으로 점차 일·생

할 병행이 곤란해지고 이에 따라 가족관계 단절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서울의 연평균 근로시간 : 2,312시간(세계 2위, 영국 일간 더타임스, '09.8.19)

이러한 일·생활의 불균형 문제로 인해 자녀양육과 기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이 가정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세계화 및 결혼연령인구의 성비 불균형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으로, 다문화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성은 자녀의 언어·학습능력 지체 등 교육의 양극화를 야기하여 빈곤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커 향후 이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될 우려가 있다.

* 기혼여성(20~44세) 출산중단이유('09, 보사연) : 자녀양육·교육부담 35.1%, 소득·고용 불안정 19.3%, 일-가정양립 곤란 15.8%, 가치관 변화 24.6%

* '09년 결혼이민자 수 : 167천명('08년 대비 15.7% 증가), 전체 혼인건수의 11% 유지

* 다문화 자녀수 : '06년 25천명 → '07년 44천명 → '08년 58천명 → '09년 103천명

이와 같은 가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가족업무의 이관 이후 2010년 가족정책의 추진 방향을 보편적, 통합적, 지역중심의 가족정책으로 잡고 다음과 같이 구체적 실행과제들을 발표한 바 있다.

<2010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의 방향>

- (보편적 가족정책) 첫째, 사후적·보호적 가족복지에서 선진국형 사회투자 관점의 보편적·포괄적 가족정책을 추진하겠음.
- (통합적 가족정책) 둘째, 개인 단위의 분절적 지원에서 가족 단위의 통합적 지원을 추구하는 능동적인 가족정책을 마련하겠음.
- (지역중심의 가족정책) 셋째, 가족-이웃-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고, 돌보는 생동하는 가족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음.

① 지역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만들기

가. 아이돌봄제도 체계화

우선 아이 돌봄제도를 체계화하기 위해 0세아 정기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법제화하며, 하교 후 아동 돌봄 및 학습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출산 후 직장에 바로 복귀해야 하는 한부모 가족, 맞벌이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당 가구의 영아(12개월 미만)를 찾아가 돌보는 정기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하교 후 아동 돌보미를 양성하여, 돌보미 가정 내에서 5명 이내의 아동(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과제를 개발해 나갈 것이다.

나. 지역사회의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 내 공동 육아 나눔터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육아 및 정보교류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품앗이(육아품앗이, 교육품앗이 등) 사업 활성화

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신축적인 양육망을 구축하여 돌봄 틈새를 보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근무시간대의 아이 예방접종, 병원 진료나 체험학습시 동행, 출장 시 1박 케어(overnight care) 등 이웃간에 상부상조로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공동육아 나눔터를 중심으로 사회적 형제자매 관계 맺기 캠페인(big brother, big sister)추진, 품앗이 희망 가정을 연결하는 육아망 코치(Community Care-Network Coach, CNC)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구축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 인터넷 열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2011년부터는 성폭력 범죄자 지역주민 우편고지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② 가족의 역량 강화

가. 위기직면 가족을 위한 「가족 보듬사업」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족에게 정신적 후유증과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충격완충망 사업」을 추진하고, 가족원이 성폭력·학교폭력, 실종 등을 당한 경우 심각한 심리적 충격(Trauma)을 받는 가족들에게 지지리더를 통한 조기 접근 및 상담·돌봄서비스 제공하는 등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천안함 사고의 경우 평택 2함대 및 실종자 가족 거주지 중심으로 심리상담가, 아이돌보미, 노인돌보미, 가족봉사단 등 17명에 대한 긴급돌봄을 2개월간 지원한 사례가 있다.

나.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을 올해 만 10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등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107개소, 신규)하고, 자활이 가능한 저소득 취약가족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09 5개소 → '10 16개소)

청소년 미혼모부자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임신한 미혼여성이 상담, 양육교육, 미혼모 시설 입소 및 정부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출산 응급상황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혼모자의 초기 위기지원망을 확대할 계획이다.('09 6개소 → '10 17개소)

또한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 만 24세 이하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최장 5년간 양육 및 조기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형 창업지원 복지자금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 복지자금 융자규모 : '08 20억원 → '09 30억원 → '10 40억원(270명)

다. 일반 가족에 대한 보편적 가족 서비스 확대

특수한 환경에 처한 가족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닌, 모든 일반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가족상담을 강화한다.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확대 : '09년 97개소 → '10년 138개소

③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가.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및 경제·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결혼이민자 특화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10년 19개 교육과정, 440명)하고, 직업훈련을 마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10년 150명, 신규)하도록 하겠다.

* 산모도우미, 원어민 강사 등 219명 수료, 136명 취업 (취업률 62.1%)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의 관건인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 등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방문·온라인교육 등 한국어교육 방법을 다각화하고, 한국어가 미숙한 결혼이민자에 대해 통·번역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 방문교육지도사 : 2,240명('10년) → 3,200명('11년) → 3,680명('12년)

* 통번역 서비스 : 210명('10년) → 250명('11년) → 280명('12년)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이주여성쉼터(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의료·법률·출국서비스를 지원(현재 18개소 운영 중)하고, 거주와 직업훈련 등 자활을 지원하는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10. 10월 서울지역 개소예정), 그룹홈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다.

나. 국제결혼 중개업의 사회적 책임강화 및 체계적 관리

국제결혼 피해 예방을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결혼당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서면 제공을 의무화하기 위해 정보 범위(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와 제공 시기 등을 법령에 명문화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외국 현지법령 준수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중개업체와 이용자간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보급하도록 하겠다.

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부모-자녀간 소통 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중언어교실을 대폭 확대(5개 교실('09년) → 52개 교실('10년)하고, 다문화언어지도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배치 및 보육시설 파견을 확대('10년, 101명)한다.

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다문화가족의 접근성 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고용지원센터 등 다문화가족 지원기관간 정보교류 등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센터 수 : 100개소('09년) → 159개소('10년) → 200개소('11년) → 230개소('12년)

④ 가족친화적 일터 만들기

가. 가족친화 기업 인증 확산 및 활성화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전향적인 인

식 변화와 친화기업에 대한 국민적 호감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연중 추진한다.

* (5월~12월) 가족친화 경영 전국 임직원 대상 순회 교육 및 온라인 교육

* (7월~11월) 가족친화 경영 활성화 컨설팅

* (5월~12월) 가족친화 경영 우수사례 확산 등 홍보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산 및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에 의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실시를 독려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상시 인증신청과 심사, 인증 기업의 사후관리 등을 담당할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추진체계 구축

가족친화제도 및 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확산,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친화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친화 정책개발의 지원 및 정책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전담 사업수행 기관인 『가족친화지원센터』를 내년부터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한다.

그리고 탄력적 근무·육아휴직 등 가족친화제도를 남성 근로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가정 친화적 아빠(‘Frendy’) 되기 운동을 확산하는 등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남성의 참여를 높여나갈 것이다.

4. 나오며

앞서 설명한 정책들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될 과제들로, 보다 근본적인 현황 파악과 중장기적 비전 설정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마련될 것이다.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과제들 중 외형을 갖추어야 하는 과제들은 대부분 실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가 많고, 가정과 직장에서의 인식 변화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정책과제들(가정 내 가사 분담, 육아휴직의 남성 이용률 제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은 여전히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면적인 경제 지원을 제외하고, 가족정책은 특히 사적 영역인 가정(가족)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 변화를 유도해 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정책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가진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개개인과 지역사회, 기업의 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것이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가족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교수

1. 가족을 향한 사회적 시선의 변화

최근 미국에선 가족의 변화를 둘러싸고 “태풍이 몰려오는 줄 알았는데 실상 강진(強震)이 발생했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저출산 고령화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부계 친족 제도의 내파(內破)와 신모거제의 정착, 다문화 가족을 넘어 “초국적 가족”의 등장이 감지되는가 하면, 5세대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기도 하다.

이제 “가족”은 사적 영역의 울타리를 훌쩍 넘어 정치적 쟁점의 핵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오늘날의 가족은 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수히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가족의 존재 기반을 위협받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대사회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들, 곧 사회적 불임(social infertility)으로 인한 인구 감소,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균형 및 조화, 이혼가족의 자녀문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부양의 위기, 더불어 다세대 사회의 도래에 따른 세대 불평등의 심화 등은 개별가족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이다.

이들 가족문제는 압축적 사회변동이 진행되면서 가족의 변화 속도와 사회의 변화 속도 간 지체(lag)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긴장과 갈등이 전면적으로 표출된 결과이다. 여기에 더하여 자녀 학대, 아내 구타, 노인 유기는 물론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실업, 범죄, 자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 근본 원인이 가족 해체에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가족문제를 곧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정책적 개입을 시도함은 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할 것이다.

둘째로 페미니즘의 영향 하에 가족과 사회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규정해온 기존의 고정관념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가족은 더 이상 사회로부터 고립된 사적 공간도 아니요 '피곤에 지친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처' 만도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가족과 사회를 상호 분리된 영역으로 보는 관점이야말로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장치요, 가족에선 일을 잠시 보류해두고 사회에선 가족을 잠시 잊고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신화(myth)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가족 기능 자체가 노동시장 구조 및 교육제도, 복지정책 등에 따라 다양한 영향력에 노출된다는 사실은 공사영역의 이분법에 내포된 허구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노동시장 구조는 맞벌이 부부의 증감 및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기회비용에 즉각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부부간 역할 분업 유형을 결정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교육제도 또한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을 통해 가족 내 사회화 기능의 왜곡을 초래하기도 하고, 글로벌 시장경제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명분으로 원정 출산 및 기러기 가족을 양산하는가 하면, 자녀의 학업성취 및 학벌주의를 매개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재생산 기능이 강화되기도 한다.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및 가족법도 가족의 고유 기능을 강화하거나 가족 변화를 추동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 관련 정책은 수혜 대상 가족의 기능 수행에 직접 연관되며,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핵가족 책임론”으로 인한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가족은 사회변화의 무풍지대에 남아 있는 생활 영역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성공적으로 적응해갈 수 있는 인력을 키워내는 동시에, 무자비한 경쟁사회로부터 가족 성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양립하기 어려운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들 모순된 요구를 균형 있게 양립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현대사회 가족의 의미 및 위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타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일에 우선적 가치를 두었으나, 현대인들은 보다 내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으로부터 만족감을 느끼고 가치의 근원을 찾는 경향이 있다. 즉 인생의 의미를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순수한 기쁨’에서 찾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성공을 위해 비인간적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보람을 위해 부와 명예 대신 소박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 대세이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부부관계는 개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장이 되고 있는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괴로움을 겪는 역설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곧 개인적 자유와 자아실현의 욕구가 돌봄 노동을 통한 희생과 헌신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게 되면서 가족은 점차 취약한 제도로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부부간의 애정과 정서적 유대에 기초한 우애 가족은 부부간의 충실한 역할수행에 기초한 제도가족에 비해 가족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안정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부부간의 친밀한 유대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로는 다양한 가족양식의 공존을 특징으로 하는 “신(新)가족 시대”를 열면서, 여전히 정상가족 대(對) 비정상가족의 이분법이 존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심각한 정책적 재고를 요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은 가족의 세포분열을 가속화시켜 모자(母子) 혹은 부자(父子)가족, 재혼 부부가 구성하는 다양한 조합의 혼합가족(blended families), 재구성된 가족(reconstituted families), 이혼 후 확대 가족(divorce-extended families)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양산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나홀로 가족”,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별거 동침”(LTBT: Living Together But Apart) 가족¹⁾, 비혼 동거, 공동체 가족, 동성애 가족 등 가족의 존재양식이 이처럼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정상가족”에 대한 신념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이로 인해 정상가족 범주에 들지 못할 경우 비정상적이거나 특이한 상황 아니면 무언가 부족한 결손 상황 그래서 부끄러운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문제는 정상가족 규범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누구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며, 정상가족 규범에 의한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정상가족과 대안가족의 구분을 철폐한다고 해서 가족개념의 범주는 “아무래도 좋다”(anything goes)는 태도를 견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신 경제 공동체이자 정서 공동체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생활양식이라면 누가 공동체를 구성하는지, 공동체 구성원의 관계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등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상가족 대 대안가족의 이분법은 정상가족에게도 상당한 압력이 된다. 정상가족 상황을 외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족내부의 균열과 갈등을 위장하는 “요새가족”(fortress family)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부정적 폐해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결국 신가족 시대의 가족정책은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의 이분법을 넘어 어떠한 가족 유형이든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견고한 제도로서의 핵가족만을 정상가족이라 고집하기 보다는, 개인의 선택 폭이 확대된 다양한 생활양식의 하나로써 개개인의 정서적 안정감과 성숙을 가져오는 장이자 건강한 인간관계를 실현해가는 과정으로서의 가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모든 가족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서의 가족정책은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가족 내부의 다양성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가족정책 또한 세분화와 다양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2. 한국가족의 아킬레스건을 넘어

한국가족에겐 아킬레스건이 여러 가닥 숨겨져 있다. 가족정책의 현안은 이들 아킬레스건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부계 혈연중심주의 및 그로부터 파생된 고부갈등을 첫 아킬레스건으로 꼽는다 하여 크게 반대한 이는 없을 것이다. 한국가족은 혈연주의에 더

¹⁾ 이혼 및 사별로 인해 홀로 된 남녀 노인이 각자 자신의 집을 지니고 있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가는 양식을 의미한다. 이들 “별거 동침”의 선택은 여성 노인에게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 노인들은 각자의 집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사노동 및 배우자 부양의 부담에서 자유로운 가운데 친밀성과 자율성을 결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신만의 거주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의 통제력이 최적 상태에서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하며, 더불어 여성 노인 스스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거나 하는 욕구와 친밀성 및 관계성의 욕구 사이에 균형을 취할 수 있음을 뜻한다.

하여 가족 성원 하나하나를 철저히 “가족 내 역할” 속에 묶어두는 불가해한 힘을 가지고 있다. 덕분에 가족 안에서 시어머니는 항상 시어머니요, 친정어머니는 항상 친정어머니로 남게 된다. 상대방 입장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처지가 같다 할 순 없기에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사돈 사이에 단단한 벽을 쌓고, 고부 사이를 미묘하게 이간질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문화인류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가족 내에서 누가 누구와 갈등을 일으키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친족관계의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실제로 부계 친족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유교 문화권에서는 고부갈등이 깊게 뿌리 내린 반면, 양계제를 채택하고 있는 서구의 경우는 고부갈등 대신 장모-사위 갈등이 자주 노출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 부계의 규범은 남아 있지만 신모거제의 정착과 더불어 굳이 부계냐 모계냐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고부관계 또한 새로운 친족관계의 틀에 걸맞게 새로운 규범과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관계 등록부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친족관계의 변화 양식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한국가족 내 아킬레스건으로는 아버지 위상 및 역할의 딜레마를 들 수 있다. 특별히 가장=생계 담당자 모델은 산업화 초기에는 기능적이었으나, 현재로서는 시장 논리와 가족 논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제 일-가족 양립과 균형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의 생애주기에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기

에, 남성의 가족역할을 복원하는 작업은 정책적으로 높은 함의를 갖고 있다 할 것이다.

서구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새로운 아버지 역할과 기능,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을 제안해보면, 첫째 부부가 동시에 부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가족정책이 필히 요망된다. 현재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부모 출산 휴가제(parental leave) 및 자녀병가 시 유급휴가제(sick leave)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들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시행 1년 이내에는 파급효과가 미미했으나 1년 이후부터는 아버지 수혜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성들의 가치관 변화를 수반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남성성 및 남성다움은 여성성 및 여성다움과 대비되는 것으로 규정되면서, 여성이 하는 일은 무조건 비하하는 경향이 있었고, 남성 자신들은 자신의 일을 통해 정체감을 규정함으로써 성공에 대한 강한 강박관념을 노출해왔다.

이제부터는 남성 자신들도 내면의 목소리에 보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진정 자신감 있는 남성만이 아버지로서의 기쁨과 보람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삶의 절대적인 의미와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만큼 남성들의 가족진출이 활발해져야 성 역할 간에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것인바,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일터에서 평등하게 통합을 이루어나가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아버지 역할 모델을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제 부모대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나 지혜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대신 부부간에 부모 역할을 둘러

싸고 가치, 기대, 계획 등에 있어 많은 견해 차이와 기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이를 조정하여 보다 이상적인 부모역할의 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아버지 상의 정립을 위해서는 1)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보람있는 일인가, 나아가 남성다움의 중요한 요인인가를 강조함으로써 동기를 강화시켜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도록 한다. 2) 남자들 스스로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도록 한 연후에 아버지 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자질을 배우도록 한다. 3) 아버지를 가족생활에 보다 적극 포용하기 위해서는 주위사람들의 지지 내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상대방의 역할에 대한 선호도와 기대를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부인의 지지와 지원이 새로운 아버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이다.

세 번째 아킬레스건으로는 명분만의 다문화 가족 정책을 지양하고 진정한 다문화 가족정책을 지향하도록 한다. 머느리만 “수입”(?)한 다음 이들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은 다문화 정책이 아니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은 더 이상 우리 삶의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 요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한 인류학자의 보고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가족은 모계(母系) 지향성이 강한 특징과 더불어 배우자와 가족을 구분하는 독특한 정서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곧 혈연을 나눈 사람만 가족에 포함시키고 남편 혹은 부인은 단순히 파트너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들 동남아시아 가족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서 건강하고 안정된 “다문화

가족”은 불가능하다.

진정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의 첫 걸음은 그들과 우리의 “다름”을 “인정”한 연후에, 우리와 다른 그들의 역사와 전통,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고자 노력하는 일이다. 우리 역사와 전통, 언어와 문화가 소중한 만큼 그들 역사와 전통, 언어와 문화도 소중함은 물론이요, 그들의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해줄 때만이 우리의 가치도 진정으로 인정받게 마련이다.

이제 100쌍 중 15쌍 이상이 결혼이민자 가족인 다문화 시대, 다문화 가족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비다문화 가족”을 향해서도 다문화 가족을 이해하고 인정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다문화의 장점을 사회적 차원에서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준비 또한 서둘러야 할 것이다.

3. 미래가족의 변화와 바람직한 가족정책

“강진(强震)”을 겪고 있는 21세기 가족 상황에서 20세기의 규범은 결혼 및 가족 기반을 공고히 함에 신뢰할만한 토대를 제공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가족정책 입안자들이나 가족 관련 전문가들은 여전히 구시대적 전제에 의존함으로써 실제 결혼 생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심각한 지체(lag)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에 예상되는 결혼 및 가족의 변화를 토대로, 향후 가족정책은 어떠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예단해보기로 한다.

첫째, 결혼-비(非)결혼의 경계가 완화되면서 결혼과 가족은 “탈(脫)제도화” 혹은 “탈(脫)법제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바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요망된다. 이미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는 기혼, 미혼 여

부에 따른 법적 책임과 권리의 구분을 점차 완화(blurring)시켜가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서구 국가들에서는 비혼 커플에게도 기혼 부부와 동일한 보험 혜택, 상속 및 기타 법적 특권을 부여해 주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와 캐나다에서는 모든 이들에게 법적으로 공인된 양육권자 혹은 후견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고, 기혼 커플이 누려온 법적 재정적 지원도 개방해주고 있으며, 혼전관계 혼외관계 동성 커플을 불문하고 그들로부터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지원해주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둘째, 동거 커플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전환이 진행될 것인바 이를 위한 정책적 준비가 요망된다. 서구에서는 이미 동거 커플의 수적 증가가 두드러져 1970~99년 사이 7배 이상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임신이 곧 결혼으로 연결되던 동거 초기와는 달리 오늘날의 동거에서는 임신 및 출산이 자동적으로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인구학자 Kathleen Kiernan에 따르면 오늘날의 동거 커플은 진화를 거듭하여 동거가 결혼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는 단계를 지나, 동거와 결혼의 구분 자체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호해지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에 따라 각 커플로부터 태어나는 자녀의 수 또한 비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역사상 유례없는 독신 생활양식(Solitary life)의 폭발적 증가를 목격하게 될 것인바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요망된다. 독신가구의 증가는 이른바 “비가족 가구”(non-family household)의 증가를 수반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생활하는 젊은 세대의 증가, 결혼을 연기하는 젊은 층의 증가, 이혼 이후 독신을 고수하는 층의 증가,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불어 새로운 가족양식으로서의 동거 증가 및 혼전 성규범의 변화는 사생아의 증가를 수반하면서 이혼으로 인한 한 부모 가족과 형태는 동일하나 과정은 상이한 한 부모 가족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다.

과거 결혼은 성인으로 가는 길에 필히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었고, 더불어 자신의 자원을 극대화하고 노동력을 공동 출자(pooling)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지금도 기혼 커플들은 자원을 합병하고 과업을 분담하며 자본을 축적해간다. 그러나 결혼이 점차 위험한 비즈니스로 변화하면서 이혼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독신을 선택하는 확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출산 혁명”(Reproductive Revolution)이 가속화될 것인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출산 혁명”은 성과 결혼, 임신과 출산, 그리고 부모됨에 이르기까지 당연시 되어온 모든 관계를 재구성해가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및 취업 유형의 변화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출산 혁명의 원인이자 결과를 가져왔다. 자녀가 결혼의 주목적이지요 결혼관계의 정착제라는 인식에 변화가 오면서 “선택적 무자녀 가족”이 매력적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의 분리는 매우 괄목할만하다. 서구에서 1960년대 초는 1/20이 미혼 여성의 출산이었으나 20세기 말에는 그 비율이 1/3로 급증했다. 1970, 80년대 혼외 출산의 대부분은 우연의 결과였으나 1997년에는 미혼 여성의 출산 중 40%가 의도된 임신으로 밝혀졌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결혼 형태의 하나가 SMBC(single mother by choice)임은 향후 가족의 지각 변동에 시

사하는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다섯째, 결혼과 가족의 민주화 속에서 부부관계의 불안정성 및 가족의 유동성이 확산될 것인 바, 이의 폐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마련이 요망된다. 실제로 남성 가장-여성 전업주부 모델을 전제로 구성된 일터의 조직과 학교 스케줄, 사회적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평등한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단 결혼의 민주화(democratization) 속에서 선택권이 다양해졌다는 긍정적 선택 못지않게 부정적 선택의 가능성도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사랑과 결혼을 결합한 낭만적 결혼이 실현되면서 부서지기 쉬운 결혼의 속성과 종족적 관계를 향한 열망은 “말과 마차처럼 늘 함께 붙어 다니는 역설”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의 경향은 평등한 결혼을 원하는 남성의 경우 “수정 남성가장 모델”(modified male breadwinner model)을 선호한다. 내용은 남편이 수입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부인이 양육과 가사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나머지 약간을 공유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젊은 세대 여성은 이 모델에 만족하기보다 차라리 싱글을 택하겠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혼에서 진행된 혁명²⁾은 다양한 삶의 영역을 변화시키고 있다. 일과 가족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에서부터 여가시간의 활용, 서로의 sexuality 이해를 거쳐, 자녀양육과 노인의 부양 방식 등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 변화는 일부에게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제한적 성역할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동시에 일부에게는 새로운 규범의 정립 없이 전통적 지원 체계 및

행동 규범을 박탈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섯째, “이혼의 규범화”는 21세기에도 계속 진행될 것인 바, 이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지속적 배려가 요망된다. 오늘날 미국의 경우 43%의 첫 결혼은 15년 이내에 이혼으로 끝나며, 1970~90년 기간 중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이혼율은 3배, 영국은 4배 증가했다. 이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평생해로”는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 화했다.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의 헌신과 몰입이 요구되고 있는 셈이다. 부부의 이혼과 동거 커플의 이별 그리고 재혼의 증가는 한부모 가족 및 새로운 양식의 복합가족(blended families)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한편 이혼 또한 변화하는 결혼 다이내믹을 읽지 못함으로써 전문가 및 사회정책의 지체현상이 두드러지는 영역이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는 부인을 보호하자는 정서가 이혼 연구의 대세를 이루어왔으나, 40세 이상 이혼의 2/3는 부인이 주도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에는 고학력, 고소득층 여성의 이혼율이 저소득층 여성보다 높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고졸 이하 여성의 이혼율이 대졸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5. 나가는 글

현재 진행 중인 가족의 변화를 탐색하면서 앞으로의 여정을 전망해볼 때, 가족에 관한 한 제도로서의 가족이 “해체” 혹은 “몰락”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나의 신화요, 안정되고 조화로운 공동체로서의 가족을 상정함 또한 신화이다. 오히려 가족은 “유동성”

²⁾ 최근 결혼을 둘러싸고 새로운 반동의 경향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음도 간과해선 안 될 것 같다. 여성잡지 타이틀로 “Why Marriage is Hot Again”이 등장했는가 하면 2000년 US 센서스에서는 남성가장 가족의 부활을 발표하기도 했다. 2003년에는 일하는 엄마들의 “The Opt-Out Revolution”이 진행됨으로써 성취도가 높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커리어를 포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 주목한 Time 지는 보다 많은 여성들이 커리어 대신 자녀와의 끈끈한 유대를 선택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liquidity) 및 “불확실성”(uncertainty)을 확대해 갈 것이며 “친밀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강화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가족 기능의 전문화와 가족 규모의 축소가 결과적으로 지역공동체와의 유대 및 사회관계(sociability)를 희생하고 핵가족만의 친밀한 관계, 자녀중심의 가족을 지향해가는 방향으로 변화해온 결과, 부부중심 핵가족은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다양한 역할 모델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는 귀 기울일 만하다.

더불어 “가족은 점차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아니

라 부모를 돌보는 자녀들로 구성될 것”이란 전망에 주목할 때,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구성이 필수적인 주장도 속고를 요한다. 21세기형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혈연관계로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계약관계로 얹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하게 될 것이며, 이들로부터 공동의 선(善)을 이끌어낼 때만이 가족이 구현해온 고유의 가치 곧 신뢰와 무욕, 희생과 헌신, 그리고 이타주의와 단결심 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곧 미래지향적 가족정책의 방향이 될 것이다.

참 · 고 · 문 · 헌

- 강이수 역음, 2009 「일 가족 젠다: 한국의 산업화와 일-가족 딜레마」 한울 아카데미.
- 강홍렬 외, 2005 「메가트렌드 코리아」 한길사.
- 김현주, 2001 「장남과 그의 아내」 새물결.
- 또 하나의 문화, 2003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또 하나의 문화.
- 심영희 외, 2000 「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출판.
- 안호용·김홍주, 2000 “한국 가족변화의 사회적 의미” 『한국사회』3집 pp.89-132.
- 여성부, 2005 「한국가족 리포트」.
- 이동원 외, 2002 「한국 가족의 현주소」 학지사.
- 이재경, 2002 「가족의 이름으로」 또 하나의 문화.
- 조주은, 2004 「현대가족 이야기」 이가서.
- 통계청, 해당년도 「한국의 사회지표」.
- 한경혜 외, 2003 “일, 가족상호작용에서의 성별 차이: 전이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7(3): 58-84.
- 한국여성개발원, 2001 「여성의 일과 삶에 관한 국민 체감 보고서」.
- 함인희, 2002 “한국가족의 위기: 해체인가, 재구조화인가?” 『가족과 문화』 14(3): 1-25.
- 올리히 벡 외, 1999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장수영 외 역. 새물결.
- E. 벡-게른스하임, 1988 「내 모든 사람을 아이에게?」 이재원 옮김, 새물결, 2000.

- Charles, Nickie, 2000 Feminism, the State and Social Policy, NY: Macmillan Press.
- Coontz, Stephanie, 2005 Marriage, a History: How Love Conquered Marriage, Penguin Books.
- Giddens, Anthony, 1992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ilbert, Neil, 2008 A Mother's Work: How Feminism, the Market, and Policy Shape Family Lif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다니애너 기틴스, 1997 「가족은 없다」 안호용 외 옮김. 일신사.
- Hochschild, Arlie, 2003 The Commercialization of Intimate Life,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매들린 케인, 2002 「무자녀 혁명」 이한중 옮김, 북키앙, 2003.
- Nelson, Hilde, ed. 1997 Feminism and Families, New York: RKP.
- 프랑크 쉬르마허, 2006 「가족: 부활이나 몰락이나」 장혜경 옮김, 나무생각.
- somerville, j. 2000 Feminism and the Family: politics and society in the UK and USA, London: Macmillan Press.
- Stacey, Judith, 1991 Brave New Families. Basic Books.
- Rudd, Elizabeth and Lara Descartes eds., 2008 The Changing Landscape of Work and Family in the American Middle Class, Lexington Books.

한국가족의 특징과 가족정책의 주요 쟁점¹⁾

김 혜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들어가는 말

급속한 산업화에 이어 정보사회로의 빠른 안착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켜 왔듯이, 가족 삶 또한 예외는 아닐 만큼 빠르게 변화해 왔다. 금세기 들어 가시화되기 시작한 고령화와 최저출산, 이혼 및 국제결혼의 폭발적 증가는 이른바 가족위기론을 등장시킴으로써 가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기술의 발명 및 보급과 함께 일련의 획기적인 사건들은 사회적 역학관계와 자원분배 방식의 변화를 통해 광범위한 사회변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족생활의 변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개인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작금의 가족변화 역시 거시적인 사회변동의 맥락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김혜영, 2007).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가족변동은 형태적·구성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가치와 관계의 변화와 맞물려 있으며, 이와같은 가족변동의 결과 또한 대단히 복잡적이고 중층적이라는 점에서 작금의 가족변동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새로운 과업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과거에 비해 느슨해지는 가족관계와 가족의 형태적 다양성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가족안정성 약화는 개인에 대한 가족 구속력의 약화와 함께 그동안 가족이 수행해온 기능의 축소 및 상실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영역에 대한 공공의 정책적 개입의 확대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관계의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집합으로서 가족이 갖는 의미와 부담이 적어지는 것만큼 개인의 보호기제로 작동해온 가족안전망 기능의 약화가 수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족변동으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

1) 최근에 발표했던 몇몇의 논문 가운데 관련부분을 발췌, 재구성하고 수정한 것이다.

능적 공백이 새로운 사회위험의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생애주기에 맞춰 다양한 가족생활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이 일과 가정에서 느끼는 갈등은 출산이나 자녀양육과 같은 재생산 활동 자체에 기인하기보다 오히려 자녀양육과 노인보호와 같은 보살핌의 문제를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는가에 좌우된다는 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요행히 이같은 가족문제에 대한 해법마련으로 명시적이고 보편적인 가족정책의 추진체계가 이미 2005년에 마련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무엇보다 서구와 달리 가족에 거는 기대가 매우 높고, 복지인프라의 미비로 최근까지 개별 가족이 유일한 개인보호의 기제로 작동되었던 우리사회에서 국민들이 가족정책에 거는 기대는 상당하다. 그러나 이미 대상별로 대인서비스 정책이 서로 다른 위상과 논리로 추진되어온 정책 환경에서 고유한 가족정책의 영역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가족정책 추진체계의 잦은 이동뿐만 아니라 가족정책의 체감도를 낮추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혜영, 2010).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한국가족이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양상 가운데 주요한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갖는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2010년 가족업무가 새롭게 여성가족부로 재이관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제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가족정책의 좌표는 물론 가족정책의 영역에서 긴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주요 정책적 쟁점이 무엇인가를 되짚어보는 기초적인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가족구성의 지체와 회피, 그리고 저출산

최근 들어 우리 주위에서 쉽게 확인되듯이, 20대 청년세대에게 취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인생의 과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심각한 청년층의 취업난에 기인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결혼가치나 자녀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적령기의 의미가 약화되었음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처럼 결혼을 연기하거나 결혼하지 않는 만혼화의 경향은 한국의 최저출산을 낳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마련은 매우 시급하다.

실제로 여성들의 평균결혼연령은 1960년 21.5세에서 2000년 26.5세, 2009년 28.7세로 꾸준히 늦추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2009년 현재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 또한 31.6세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5-29세 연령대의 여성 미혼율은 1985년 18.4%에서 1995년 29.6%, 2005년에는 59.1%로 지난 20년간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의 미혼율 역시 1985년 50.7%, 1995년 64.4%, 2005년 81.7%로 1.5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0-34세 여성인구의 미혼율 또한 1985 4.2%에서 2000년 10.7%, 2005년 19.7%로 약 5배 가까이 증가했고, 남성 또한 동기간에 각각 9.4%, 19.4%, 41.2%로 급속히 증가해 왔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이처럼 초혼이 늦어지면서 덩달아 초산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24세 여성의 출생아는 2만4400명이었지만, 이는 전년(2만8173명)보다 13%가량 감소한 수치이자 1981년(33만5331명)에 비하면 1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28년 전에는 20대 초반의 엄마들이 한 해 낳은 아이가 30만 명이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2만 명에 불과할 만큼 20대 여성의 출생아동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30대 여성의 출산은 크게 늘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0~34세의 출생아 수는 19만2900명으로 1981년(10만2251명)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35~39세 출생아 수도 6만900명으로 1981년(2만5459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출생아 수를 모두 합한다고 할지라도 작년 한해 동안 잠정 집계된 출생아 수는 약 44만 5천명에 불과한데, 이는 70년대 연평균 100만 명가량의 출생아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통계청, 2010).

이처럼 초혼연령을 늦추거나 결혼하지 않은 독신 인구가 늘어나고 혼인 후 자녀출산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은 결혼과 자녀출산이 개인의 삶의 기회를 크게 제약한다는 인식과 함께 결혼과 자녀출산을 근간으로 하는 개인들의 가족생활이 결코 녹록치 않은 우리 사회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요컨대 현재의 사회 환경에서는 결혼과 자녀출산이 대단히 도전적이거나 부담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대다수의 개인들에게 있어 일하면서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해 깊이 천착해볼 필요가 있으며, 물론 가족정책 역시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최저출산의 원인규명과 이의 해법 마련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회에서 저출산의 문제는 여성의 지위변화와 함께 결혼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연동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의 돌봄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방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요컨대 일찍이 저출산 문제를 경험해온 선진국이나, 현재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일본이나 싱가포르 모두 출산율이 ‘가족돌봄

의 공백’과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최근 다양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사회는 여전히 가족 내 돌봄노동을 둘러싼 성역할분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의식변화에 적합한 사회제도나 지원정책이 아직은 미비하다. 이런 점에서 남녀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소득획득과 사회활동으로 인한 성취감을 경험하고, 아울러 그들의 자녀를 위해 기꺼이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로 볼 수만은 없다. 따라서 가족정책의 주요 추진 과제 역시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나 노부모를 돌봐야 하는 가족 등 대다수 가족에 대한 양육과 돌봄 부담을 사회와 기업이 함께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일-가족생활의 조화를 촉진하고,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일과 양육에 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양성 평등한 고용기회를 촉진하는 일가족양립제도의 구비와 함께 이를 생활화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OECD, 2002).

III. 가족다양성 증가와 가족의 주변부화

최근 가족의 특징적 변화를 꼽는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가족의 다양성 증가에 관한 것이다. 산업화와 함께 한국의 가족형태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시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되는 변화는 가족규모의 감소로, 1975년 평균 가구원 수는 5.0명이었으나, 30년이 지난 2005년에는 2.9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던 것이다. 또한 세대구성 역시 단순화되는 경향이 확인되는 바, 지난 25년 동안 3세대 가족은 절반이하로, 2세대 가구는 68.5%에서 55.4%로 감소했음에 비해 1인 가구는 무려 4배 이

상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특히 1인가구의 증가는 제도적 결혼관계에 진입하지 않는 미혼과 이혼 및 별거로 인한 단독가구, 노인 1인 가구의 증가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부부 혹은 부부와 미성년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생활의 측면에서는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부부가족이라 할지라도 과거에는 남성 연상혼의 비중이 압도적이었음에 비해 점차 동갑이거나 여성 연상혼의 비중이 증가해 전체 결혼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가구소득구성방식에 있어서도 부부가 함께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맞벌이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가 하면, 부부의 동일 국적이나 민족적 동질성이 당연시될 수 없을 정도로 국제결혼의 건수와 비중은 크게 증가해 왔다.

기실, 동일한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계층적 질서에 따라 이들이 직면하게 되는 가족 현실은 상당히 다른 함의를 가지게 된다. 즉 현대가족의 특징으로 묘사되는 가족다양성 역시 특정의 계층에서는 자의적인 선택 결과이지만, 자신의 선택이 구조화되어 있는 계층에서는 선택권이 박탈된 상황적 결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가족의 다양성을 둘러싼 논의는 진정한 다양성의 증가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논란으로부터²⁾ 왜 이처럼 가족이 다양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 규명에 이르기까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족다양성 증가가 갖는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현대사회에서는 누구와 언제,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혹은 결혼하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함

에 있어 개인의 취향과 동기에 따른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개인 결정에 따라 각기 다른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가족구성 방식에는 그 자체에 이미 다양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 다양성 증가는 개인의 기회구조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성의 방식으로 가족을 형성 또는 유지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과 제한된 기회구조에 대한 일종의 적응 양상으로 출현한 가족형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김혜영 외, 2008). 예컨대 꾸준히 증가해온 맞벌이 가구는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연계된 결과인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가구의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학력이나 기술, 자본을 소지하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에서 심화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들 계층의 여성들에게 있어 노동시장 참여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불리한 인적자본으로 기혼여성들은 비정형,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어 있어 안정적인 가족의 경제적 기반마련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 계층의 맞벌이 가구에 특화된 가족지원정책은 기성의 맞벌이 가구 지원과는 또 다른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 이미 몇몇 데이터 분석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상위소득 계층에서의 맞벌이와 달리 하위소득계층의 맞벌이 가구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크게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홍식, 2006; 김영미, 신광영, 2008; 김혜영, 2008b:22-23에서 재

2) 한국가족은 규모와 범주가 축소되고 가족구성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일부계층에서는 여전히 개인보다는 집단으로서 가족을 강조하는가 하면 부부보다는 자녀관계의 비중이 더욱 중요시되는 가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혹은 가족의 형태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구구성은 지극히 단순화되고 가족범주 또한 혼인과 혈연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가족다양성은 감소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백진아, 2007; 함인희, 2008; 김혜영, 2008b:25).

인용).

또한, 현대사회에서 결혼과 이혼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지만, 이혼을 선택한 여성의 삶 또한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음은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김미숙 외, 2005, 김혜영 외, 2008). 실제로 이혼의 증가는 남성 중심적인 노동시장과 성 분업에 근간을 둔 근대가족의 위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지만, 여전히 견고한 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로 인해 결혼관계의 자유로운 해체와 구성이 성 구분적인 근대가족의 대안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가구주 가족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지난 20년간 남성가구주비율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성가구주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구주는 1980년 1,169천명에서 2008년 3,689천명으로 약 3.2배 증가했으며, 비율로는 1980년 14.7%에서 2005년 22%로 증가해 왔다(통계청, 2008). 이러한 여성가구주의 증가는 이혼과 미혼의 증가에 기인하는데, 특히 90년대 들어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구주는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김혜영, 2008c:27).

그러나 여성가구주 가구로의 전환은 곧 여성빈곤의 주요한 통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존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남성가구주 가족의 3배에 달하고(석재은, 2004; 한국여성개발원, 2003), 우리나라 여성가구주 가족의 거의 절반이 만성적 빈곤상태이며(금재호, 2001), 여성가구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자 중 여성자활대상자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남식, 신은주, 성정현, 2002). 또한 최근

2006-2007년의 복지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남성가구주의 가구가 저소득가구원으로 분류된 비율은 2006년 19.3%, 2007년 19.9%에 비해 저소득가구원으로 분류된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2006년 53.3%, 2007년 55.9%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소득가구원으로 분류된 남성가구주의 가구의 약 3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안상수, 민현주 외, 2008).

이외에도 급세기로의 전환과 함께 급속하게 증가해온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고려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2000년 이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크게 증가하여,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2001년 10,006명에서 2006년 30,208명으로 불과 5년 이내에 3배가량 급증해 왔다는 단순한 사실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전체 결혼의 1% 수준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결혼방식 역시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 결혼이 주종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이들 가족의 비약적인 증가세만으로도 이들 가족은 주요한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와같은 국제결혼의 증가원인과 연관되어 있다.

대체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세계경제의 재편이 초래하는 계층의 양극화와 농촌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주변부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김혜영, 2008c). 실제로 한국사회 역시 결혼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그들의 지위가 주변화된 남자, 즉 도시 중하류층과 농촌의 남성³⁾들 중심으로 우리보다 형편이

3) 한 연구에 따르면, 2004년의 경우 농어촌 혼인의 27.7%, 2005년 35.9%, 2006년에는 농어촌 남성 결혼의 41%가 국제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양순미, 2006:156).

어려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는 방식으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당부분 개선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형성과정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여전히 결혼이 용이하지 않은 농촌총각이나 도시 하류계층의 남성들이 중개업소를 통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결혼의 준비가 시작되고 있다. 즉 현재의 다문화가족은 주로 저소득층, 혹은 중간계층이지만 한국여성들과의 초혼이 가능하지 않는 일부의 초·재혼 남성들이 내국인과의 결혼보다 적은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최후에 선택하는 가족구성의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성과 빈곤, 자녀사회화기능의 취약성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5년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 가정의 52.9%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이며(보건복지부, 2005), 또한 전남과 광주 인근지역의 국제결혼가족의 경우 역시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이하 48.9%, 150만원 이하의 가구까지를 모두 합하면 전체 다문화 가족의 80%가 차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김오남, 2006). 더욱이 이들의 결혼은 사설 중개업자나 종교단체, 친구나 친척의 소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맞선부터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 극히 짧아 서로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 결혼이 성립되고 있으며, 나이가 중개업자를 통할 경우 대개 결혼 자체가 금전적 거래의 형식을 내포하고 있어 이들 결혼의 취약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 결과 근자에 들어 다문화가족의 높은 해체를 목도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건수는 2003년 약 45.4%로 증가하였지만, 2004년도에는 76.3%, 2005년도는 51.7%, 2006년에는 64.1%, 2007년 44.5%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안상수, 민현

주 외, 2008: 65). 즉 결혼에 대한 열망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부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불안정성으로 결혼 시기를 늦췄거나 여전히 주변 부적 위치에 속한 남성들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이 형성되고 있지만, 국제결혼이 갖는 문화적 이질성과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모순적 구조로 인해 이들의 결혼 및 가족관계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말 그대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새로운 가족형태로 이들 가족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IV. 가족의 개인화와 돌봄 위기

그동안 한국가족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강한 가족주의로 대별되어 왔지만, 급속한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이같은 한국의 가족주의는 상당부분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화된 삶의 방식과 규준이 수용되는 대신 이제까지 행위규범의 원형으로 인식되어온 가족주의의 효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동일한 관심이나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와 탈퇴를 선택하는 인간관계가 부상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의 관계맺음 방식 또한 쉽사리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의 영속과 변형, 가족에 대한 개인의 몰입과 헌신을 강조해온 산업사회에서와 달리, 자유롭게 가벼우면서 느슨한 인간관계가 우리의 일상과 가족생활에 침투하게 된 것이다(김혜영, 2007).

과거에 비해 현대 한국인들은 결속과 유대의 욕구 뿐만 아니라 개체성과 자율성의 욕구 또한 충족하길 원하고 있어 상호구속적인 결혼이나 혈연적 유대보다는 독신이나 동거, 혹은 결혼 후에도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유연한 결혼 및 가족관계를

선호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도 가족은 선택과 관계성의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과거에 비해 결혼을 통한 가족 구성은 일련의 '선택'의 과정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예컨대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1991년의 경우 75%에 달하지만, 2006년의 경우에는 57.6%로 낮아지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2006). 그 결과, 비정형 가구로 분류되는 1인 가구 역시 크게 증가하여, 1980년 총 가구(일반가구)의 4.8%에 불과하던 1인 가구는 90년 9.0%, 2000년 15.5%, 2005년 20.0%로 증가해 왔다.

한편, 이러한 가족구성도의 유연성은 전통적인 가족 안정성의 약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가족 지원정책의 확장을 요청하게 된다. 순수한 동기와 욕망에 좌우되는 오늘날의 가족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미부여와 관계의 질이 결혼생활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하므로 이제 가족은 동일한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는 평생운명공동체로서의 성격은 약화되고 충분한 만족을 주고받는 상호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한 관계로서의 사랑과 결혼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상호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관계는 쉽게 단절될 수 있다(Beck & Beck Gernsheim, 1999, 251-262; 김혜영, 2006:24).

여기에 더해 날로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확산으로 개인과 외부세계를 연결시켜주는 도구가 개인화되면 될수록 가족성원들은 각기 자신의 행동원칙과 시간대를 갖게 됨으로써 가족의 개별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물론 새로운 통신매체의 등장과 통신기술의 보편화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시켜주기도 하고, 그 결과 확장적인 사회관계를 경험케 하는 긍정적 측면 또한

적지 않다(조정문 외,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화된 통신매체로 인한 개인화된 라이프스타일과 의사소통의 확산은 결국 과거에 비해 가족 공통의 관심사와 목표를 공유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과학 및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확산으로 개인과 외부세계를 연결시켜주는 도구가 개인화되면 될수록 가족성원들은 각기 자신의 행동원칙과 시간대를 갖게 됨으로써 가족의 개별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이러한 개별화의 추세 속에서 가족 공통의 관심사와 목표가 상실될 경우라면 가족의 결속과 유대는 그만큼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박부진, 이해영, 2000). 따라서 오늘날 한국가족 역시 특정한 가족규범에 의존하기 보다는 가족원 스스로가 가족관계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기획과 전략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개별 가족의 고유한 가족문화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가족만의 친밀성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기제를 확보하지 못하는 가족들은 외부적인 자극이나 위기에 쉽게 무너지게 되고, 이때 가족이 담당해왔던 최소한의 가족원 보호는 곧 사회적인 책임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 산업화된 사회에서 가족은 가족 밖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으며, 현재는 개인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향성은 쉽게 확인하게 된다. 특히 이와같은 가족의 개인화는 제도로써 가족이 갖는 개인구속력을 약화시키는 것임과 동시에 전통적인 가족의 개인보호기능의 종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갖게 된다(김혜영, 2007b). 즉, 전통적인 가족역할이 유명무실해지고 각종 상업적 매체에 의해 개인은 더욱 쉽게 표준화되어가는 만큼 현대인들은 사회제도에 얽매이고 의존할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박승희, 2006). 실제로 한국 역시 급속한

사회변동의 부산물로 지역공동체가 약화되고, 이웃 간의 교류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친족의 상호부조 네트워크는 헐거워지고 그 범주 또한 크게 축소되면서 개별 가족들은 자녀양육이나 노인돌봄을 위한 가족외적 자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대사회에서 개별가족이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존할 수 있는 해법은 이제 친족이나 이웃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돌봄 노동을 상품으로 구매하거나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방식 혹은 공공의 지원서비스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김혜영 외, 2009).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노인 인구 10명 가운데 6명(61.8%)은 자녀와 함께 살지 않으며, 앞으로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을 상회하고 있어 전통적인 가족의 노인 돌봄 기능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바람직한 생활방식으로 수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8). 따라서 급속한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노인세대는 그들만의 가구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고, 그들 스스로가 노후생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일례로 2008년 11월 발표된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 생활비 제공자는 자녀 도움없이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가 하면, 부모의 노후생계는 '가족과 정부·사회가 같이 돌봐야 한다'는 견해가 43.6%로 '가족'(40.7%)이라는 응답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8). 현재와 같은 부모자녀관계의 변화, 적어도 과거와 같은 부모부양의 방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년인구는 이제 제도화된 공적 서비스나 상품화된 돌봄서비스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세어진 시장경쟁 속에서 이들은 누가 어떻게 보살피며, 더욱 길어진 이들 노년기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오늘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V. 결어 및 정책적 함의

오늘날 한국사회의 거대한 변동의 근간은 무엇보다 인구학적 변동에 기인하는 것이고, 특히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바로 현재의 한국 가족구조변동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가족정책의 사명과 구체적인 지원방향은 사뭇 중요하다. 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일련의 가족변동은 단일한 규범이나 원리만으로는 한국가족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성·세대·계층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연동되어 있는 저출산과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와 같은 위기적 징후 또한 적지 않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는 이제까지 행위규범의 원형으로 인식되어온 가족주의의 약화와 평등한 개인관계에 기초한 다양한 개인의 욕구를 인정하고 사적영역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문화변동의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권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가족변화를 단순히 개인권의 확장이나 사적 영역의 자율성 확대로만 이해할 경우, 여성이나 노인, 주변부 집단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위험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족변동에 상응하는 포괄적인 가족지원방안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가족정책은 보다 확대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무엇보다 가족정책의 핵심영역에 해당하는 돌봄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와 지속적인 서비스 확충노력을 통해 맞벌이 가구는 물론, 한부모, 노인단독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와 이들 가족주기에 부합하는 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2005년 이후 감소세이지만, 여전히 2009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3만 3천 건으로 전체 결혼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은 한

동안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여타 가족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과의 균형성이 반영된 지원체제로 재구조화되어야 하는 과제 또한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가족지원정책으로의 안착을 위해서는 기성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달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되, 전 사회계층의 성원들이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가족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특정한 대상과 취약계층에 서비스가 집중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만 보편적인 가족정책으로서의 명

실상부한 위상을 갖게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여기에 더해, 가족을 둘러싼 외부환경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에 대한 남성참여는 대단히 미약하다는 점에서 개별 가족문화 역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아버지들의 가사 및 자녀양육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캠페인과 더불어 구체적인 생활의 현장에서 일종의 문화적 압력으로 느껴질 만큼의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나아가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아버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남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아버지 참여는 가족정책의 여성화를 넘어서는 주요한 전략의 하나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참 · 고 · 문 · 헌

- 김두섭(2005),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및 전망,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미숙 외(2005),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지원정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01), 「최근 가족해체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미 · 신광영(2008), “기혼여성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가구소득 불평등의 변화”, 『경제와 사회』 통권 77호:79-106.
- 김오남(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 김혜영 외(2005), “여성빈곤의 구조적 요인과 빈곤의 여성화” 『아시아 여성연구』 44집 1호:5-51.
- 김혜영 외(2007),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2007b) “정보사회와 가족의 구조변동”, 『사회변동과 여성주체의 도전』, 국인포매이션.
- 김혜영 외(2008), “여성의 이혼과 빈곤”, 『가족과 문화』, 20집 2호:37-64.
- 김혜영(2008b), “한국가족의 다양성 증가와 이중적 함의”, 『아시아여성연구』 47집 2호.
- 김혜영(2008c), “신자유주의와 다양한 가족” 한국사회 9집 2호
- 김혜영, 홍승아 외(2009), 「가족친화사회환경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 문현숙 · 김득성(2002), “이혼후 적응을 위한 장기교육프로그램의 모형개발”, 『대한가정학회지』, 44(6):197-211.
- 백진아(2007), “한국기혼여성의 가족경험”, 『담론 201』10(3). 241-269.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안상수 · 민현주 · 황정미(2008), “지표를 통해서본 한국여성 삶의 변화”, 『한국여성 삶의 변화와 미래 아젠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순미(2006), “농촌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농촌사회』 16(2): 151-179.
- 윤홍식 외(2006), 「정보화로 인한 미래 가족의 경제적 기능변화에 대한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안상수 · 민현주 · 황정미(2008), “지표를 통해서본 한국여성 삶의 변화”, 『한국여성 삶의 변』
- 앤소니 기든스(1992),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배은경, 황정미 역), 새물결, 1996.
- 벡 & 벡-게른사임(1990), 『사랑은 지독한 혼란』(강수영, 권기돈, 배은경 역), 새물결 1999.
- 통계청(2005), 「가계조사」
- 통계청(2008), 「2008년 보건·가족부문 사회조사」 결과
- 통계청(2008), 『2008 고령자 통계』.
- 한국여성개발원(2003), 「여성빈곤퇴치를 위한 정책개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2009년 여성통계연보」